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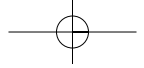
제1절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확대 및 제도화

제2절 인도적 대북지원 지속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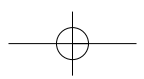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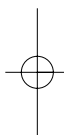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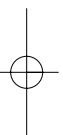
제3절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제4절 북한인권 개선 노력

남북간 인도적 사업은 상반기까지 적십자회담, 이산가족 상봉, 대북지원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북한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당국간 인도적 사업이 잠정 중단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민간차원의 지원은 계속되었으며,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은 자립기반 조성 방향으로 정착지원 정책을 시행하였다.



MINISTRY OF UNIFICATION



IV

남북간 인도적 문제 해결 노력

2006년 남북간 인도적 사업은 상반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정부의 대북지원 유보조치가 있었으며, 북한은 이에 반발해 이미 합의한 이산가족 대면상봉과 화상상봉,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등 당국간 이산가족 교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2006년 2월 개최된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는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6.15와 8.15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여 2차례의 상봉행사와 1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하였다. 특히 2006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국군포로·납북자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하였으며, 제14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시에는 1978년 8월 6일 군산 선유도에서 납북된 고교생 김영남의 모자상봉이 성사되었다.

대북지원은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정부-민간-국제기구간 역할을 분담하여 영양개선·질병관리·건강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중점 추진하였다. 당국차원에서는 비료 35만톤을 2회에 걸쳐 지원하였다. 하반기부터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보류되는 상황에서도 민간차원의 지원은 지속되었으며, 2006년 7월 발생한 북한의 수해에 대한 복구 지원이 한적 및 민간단체를 통해 이루어졌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국내법과 국제법 원칙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고 국내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에 대해서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1절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확대 및 제도화

남북한 분단 상황이 이미 반세기를 경과하였고 이산가족들도 고령화되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참여정부는 어떠한 정치적 상황에서도 이산가족 교류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금강산상봉은 매년 23차례 실시되는 등 실질적 정례화 단계에 진입하였고, 2005년부터는 화상상봉이 실시되면서 교류 방식이 다양화될 수 있는 기틀도 마련하였다.

2006년 상반기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던 이산가족교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북한의 일방적인 사업 중단 조치로 금강산 면회소 건설과 8.15계기 특별화상상봉이 중단되면서 2004년 하반기 상봉 일시 중단에 이어 다시 한번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부는 2006년에 2차례의 금강산 상봉을 실시하였고, 이 중 6.15계기 특별상봉에서는 상봉대상자를 2배로 확대하는 성과도 있었다. 8.15계기 특별화상상봉도 그 이후 일시적으로 중단 상태이지만, 남북이 상봉대상자 확대에 합의하여 향후 사업 재개시 교류확대를 기대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등 일정 부분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2006년에는 이산가족 수요에 기초한 객관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이산가족교류 확대에 대비한 내부기반을 조성하였다. 이와 함께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도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1. 당국차원의 교류 추진

당국차원의 교류는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에서 이산가족상봉 등 인도적 문제의 조속한 해결에 합의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00년 이후 현재까지 14차례의 금강산상봉과 4차례의 화상상봉을 실시하였다.

교류과정에서 생사가 확인된 이산가족은 2차례의 생사주소확인 시범실시를 포함하여 남북 총 39,217명이며, 서신교환도 1차례의 시범실시 600건과 이산가족상봉행사시 79건 등 총 679건이 성사되었다. 2006년에는 상반기 동안 2차례의 상봉행사와 1차례의 화상상봉 실시를 통해 총 674가족 3,236명이 상봉하였고 8,314명이 생사확인을 하였으며 주요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당국차원의 이산가족 교류

단위: 건/명

구분 \ 연도별		'00	'01	'02	'03	'04	'05	'06	총계
상 봉	(건)	403	200	398	598	400	597	674	3,270
	(명)	2,394	1,242	1,724	2,691	1,926	3,134	3,236	16,347
생사확인	(건)	792	744	261	963	681	962	1,069	5,472
	(명)	7,543	2,670	1,635	7,091	5,007	6,957	8,314	39,217
서신교환	(건)	39	623	9	8	—	—	—	679
	(명)	39	623	9	8	—	—	—	679

가. 제13차 이산가족상봉

제13차 이산가족상봉행사는 2006년 2월에 개최된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의 합의에 따라 2006년 3월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진행되었다.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남한측 99명과 동반가족 49명이 재북가족 239명을, 3

월 23일부터 25일까지 북한측 100명이 재남가족 420명을 상봉(총 907명)하였다. 제13차 이산가족상봉행사는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나 북한이 남한측 기자의 취재를 제한함에 따라 공동취재단이 조기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정부는 제13차 상봉행사 이후 이러한 돌발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자단과 사전협조 등 상황관리 체계를 정비해 나갔다.

나. 제14차 이산가족특별상봉

제14차 이산가족상봉행사는 2006년 2월 21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6.15계기 특별상봉 형식으로 금강산에서 이루어졌다.

2006년 6월 19일부터 30일까지 남한측 가족 195명과 동반가족 96명이 재북가족 468명을 상봉하고, 북한측 가족 198명이 재남가족 819명을 상봉함으로써 총 1,776명이 상봉하였다. 특히 제14차 이산가족특별상봉은 상봉대상자를 2배로



제14차 이산가족상봉행사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교류 규모를 확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14차 이산가족상봉행사는 제13차 이산가족상봉행사시 마찰을 빚었던 기자단 취재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기자단과 사전협조는 물론 북한과도 수차례의 사전 설득노력을 통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다. 제4차 화상상봉

화상상봉은 인도적 문제 해결에 첨단 IT기술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거동이 불편하여 상봉행사에 참여하기 어려운 고령 이산가족들에게 상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6월 17일 정동영 특사와 김정일 위원장간에 합의되었다. 화상상봉은 2005년 한해에만 8월 15일 제1차 화상상봉을 시작으로 총 3차례 실시되었다.

2006년에는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제4차 화상상봉 1차례만 실시되어, 우리

2006년도 이산가족 상봉 현황

구분	13차 상봉	14차 상봉	4차 화상상봉
일정	'06.3.20~3.25	'06.6.19~6.30	'06.2.27~2.28
상봉 횟수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작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단체상봉 1회 개별상봉 1회 참관상봉 1회 작별상봉 1회 동석식사 2회	화상상봉 1회
참관	삼일포(금강산)	삼일포(금강산)	-
상봉 가족 수	남한측 148명이 재북가족 239명 상봉(남한측 동반 가족 49명 포함) 북한측 100명이 재남가족 420명 상봉	남한측 291명이 재북가족 468명 상봉(남한측 동반 가족 96명 포함) 북한측 198명이 재남가족 819명 상봉	남한측 153명이 재북가 족 100명 상봉 북한측 119명이 재남가 족 181명 상봉

측 9개 도시, 13개 상봉실과 북측 평양 10개 상봉실을 연결하여, 1일 4회 상봉가족별 2시간씩 남북 동시 10가족이 상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남측 153명이 재북가족 100명을 상봉하였고, 북한측 119명이 재남가족 181명을 상봉(남북 총553명) 하였다. 2006년 8월에 실시될 예정이었던 제5·6차 특별화상상봉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최종 대상자 선정 단계에서 중단되고 말았다.

2. 민간차원의 교류 지속

정부는 당국차원의 교류 확대 노력과 함께 제3국을 통한 생사확인, 상봉 등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도 조용한 가운데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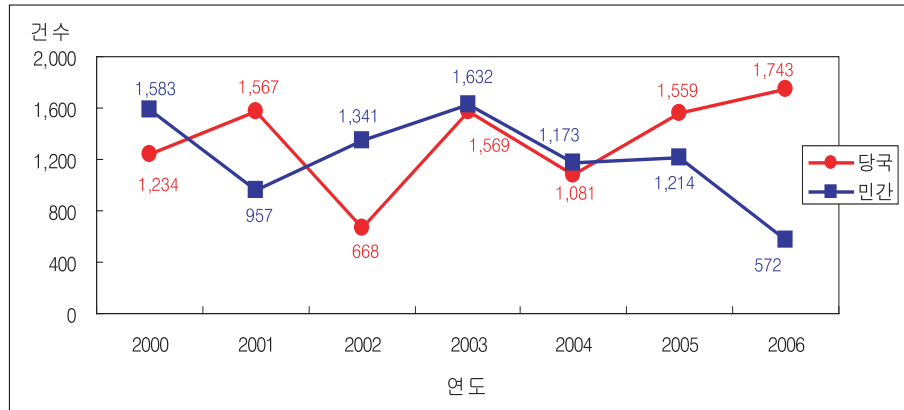
이러한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는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노력으로 꾸준히 지속되어 1989년 교류가 시작된 이래 2006년까지 생사확인 3,667건 서신교환 10,680건이 성사되었으며, 제3국을 통한 상봉은 1,585건이 성사되었다. 민간교류는 주로 친척·친지 등 해외동포, 언론매체, 동향인 등의 주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류의 중개지역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 민간차원의 이산가족교류 현황 〉

단위 : 건(명)

구분 \ 연도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총계
제3국상봉	6	11	19	12	11	17	18	61	108	195	148	165	203	280	187	94	50	1,585
방북상봉									1 (2)	5 (18)	4 (9)	5 (22)	5 (24)	3 (15)	1 (5)	1 (5)	4 (19)	29 (119)
생사확인	35	127	132	221	135	104	96	164	377	481	447	208	198	388	209	276	69	3,667
서신교환	44	193	462	948	584	571	473	772	469	637	984	579	935	961	776	843	449	10,680

2000년 이후 당국, 민간 이산가족 교류현황 추이



3. 교류확대에 대비한 내부기반 조성

가.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사업은 2000년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이후, 3년여 만인 2003년 11월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가 성사되어 2005년 8월 31일 금강산에서 착공식을 가졌다. 200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2006년 6월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재 공정율은 30%정도 진행되었으며, 향후 상설 이산가족 면회소가 건설되면 이산가족상봉을 제도화하고 상봉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의 쌀·비료 지원 유보조치에 반발한 북한은

이산가족면회소 개요

-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 앞구역(관광특구지역내)
- 대지면적 : 50,000㎡(15,000평), 연면적 : 19,835㎡(6,000평)
- 규 모 : 지하1층 지상12층 및 전망대
 - 면회소동(1,000명 수용규모), 면회사무소동(2동), 파워 플랜트 등
- 구 조 : 철골구조 + 철골콘크리트 구조

2006년 7월 19일 이산가족사업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으며, 그 결과 2006년 7월 21일 면회소 건설인력이 철수하였고 공사가 일시 중단되었다.

나. 이산가족 실태조사

남북 이산가족문제가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어 이산1세대의 비율이 감소하고 2세대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변화된 정책 환경에 부응하고 이산가족정책의 정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산가족에 대한 심층적인 기초자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6년 이산가족문제 현황 분석과 정책대안 개발을 위하여 이산가족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는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이산가족 510가족을 무작위 추출하여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이산가족 교류방법으로는 생사·주소확인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이산1세대와 이산2세대는 이산가족 정체성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산가족 정책 추진시 이러한 이산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와 함께 정부는 매년 이산가족 교류 설명회를 개최하여 전국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정부의 이산가족 정책을 설명하고 이산가족 교류절차에 대해 안내해오고 있다. 2006년에는 청주, 나주, 울산, 마산에서 4차례 실시하였다.

4.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납북자는 크게 6.25전쟁시기 납북자와 전후납북자로 분류된다. 전쟁시기인 6.25전쟁 중 납북자는 1953년 발간된 대한민국 통계연감에 따르면 84,532명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1956년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대한적십자사가 실시

한 실향사민 등록사업에는 7,034명이 등록하였다.

휴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의한 납북자는 총 3,795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2000년 이후 탈북 귀환한 납북자 4명을 포함하여 3,314명(87%)이 귀환하였고, 현재 미귀환자는 481명(어민 429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방부는 6.25전쟁 중 실종된 국군을 41,971명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중 포로교환시 귀환한 8,726명과 유가족신고 및 관련자료에 의해 전사처리된 13,836명을 제외한 19,409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국방부는 최근 귀환한 국군포로와 북한이탈주민 등의 증언을 통해, 2006년말 현재 최소한 국군포로 500여명이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53년 포로교환 이후 귀환한 국군포로는 1994년 10월 조창호 중위가 최초로 귀환한 이후 현재까지 총 66명의 국군포로가 귀환하였다. 특히, 참여정부 시기에 탈북 귀환한 국군포로는 37명에 이른다.

정부는 납북자·국군포로문제의 해결을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하고 대북정책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남북 장관급회담과 적십자회담 등을 통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적·대승적 차원에서 소모적인 논쟁과 시비를 지양하고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 및 가족상봉 성사에 우선 주력하였다.

2006년 4월 21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기존의 이산가족 틀내에서의 점진적 해결방안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군포로·납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북한측이 대범하게 호응해 나온다면 우리측도 이에 상응한 협력의 결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임을 표명하였다.

북한측은 처음에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나 우리측이 전체회의와 수석대표 접촉 등 다양한 접촉 계기를 통해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공동보도문에 “남과 북은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는 합의사항을

포함시켰다. 이번 합의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노력과 함께 정부는 현실적 접근방식으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시 생사 확인의뢰자 명단에 납북자·국군포로를 일부 포함시켜 생사확인 및 가족상봉 등 미흡하나마 성과를 거두었다. 지금까지 14차례의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통해 납북자·국군포로 161명에 대한 생사확인을 북측에 의뢰하여 32가족 136명의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이 상봉하였다. 특히 제14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행사시에는 1978년 8월 6일 군산 선유도에서 납북된 고교생 김영남의 모자상봉이 성사되었다.



김영남 모자 상봉

김영남 모자상봉 성사를 위해 정부는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 김영남의 생사 확인을 요청한 이후 이산가족 상봉대상자 최종명단 교환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북한을 적극 설득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유도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 6월17일 전통문을 통해 김영남의 생존을 확인하고 김영남 모자상봉을 제의하여 왔다.

납북자·국군포로 생사확인·상봉 현황

(2차~14차 이산가족상봉)

구 분	생사확인/의뢰수	생존확인	사망확인	확인불가	상 봉	상봉가족
전후납북자	79	14	18	47	13	15가족(69명)
국군포로	82	13	9	60	11	17가족(67명)
합 계	161	27	27	107	24	32가족(136명)

한편, 정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전후 납북피해자지원법’ 이라 함)을 2006년 10월 20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법률안에서는 납북자의 송환노력이 국가의 책무임을 명확히 하고 납북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아온 납북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하여 보상 및 지원을 하며 귀환 납북자가 대한민국에 조속히 재정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후 납북피해자지원법 제정 추진은 정부의 납북자문제 해결 의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법률이 제정될 경우, 납북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하고 정부의 납북자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 제고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제2절 인도적 대북지원 지속 추진

북한에 대한 지원은 북한 주민을 도와주는 순수한 인도적 차원의 문제로서 정부는 북한 주민이 기본적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북한의 인도적 상황, 우리 정부의 부담능력,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1995년 이후 지난 10년간의 식량·의료 등 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식량난은 부분적으로나마 해소되었으며, 2004년 용천재해 지원을 계기로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민관상호 보완구도하에 북한의 자립·자활을 돕는 개발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왔다. 2005년 정부는 식량난과 경제난의 장기화로 영양부족 및 발육부진 상태가 심각한 북한 영유아(230만명 추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기획, 시범 추진하였다.

2006년에도 정부는 당국차원에서 의료 35만톤을 2회에 걸쳐 지원하였다. 또한 5개년 계획하에 북한 영유아 지원사업을 민간-국제기구와의 역할 분담하에 영양개선·질병관리·건강관리 등 3개 분야에서 중점 추진해 왔다. 그리고 7월 5일 미사일 발사로 대북지원이 중단된 상황에서 발생한 북한 수해복구를 위해 정부는 긴급구호 차원의 지원을 결정하고, 수해복구물자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적을 통한 대북 수해지원은 일단 유보되었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1990년대 중반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던 북한 내 아사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국제기구의 조사에 의하면 급·만성 영양장애나 저체중 현상이 절반 이상 감소하였다고 전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가 지원하는 쌀이나 의료, 긴급구호물품들이 북한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데 실질적이고 귀중한 도움이 되고 있

다는 것을 북한 주민들도 잘 알고 있으며, 남북 고위당국자간의 만남에서도 북한은 우리의 대북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대북지원 현황

(단위: 만불)

구분	'95.6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누 계
한 국	정부	23,200	305	2,667	1,100	2,825	8,139	7,522	8,915	9,377	11,541	13,588	109,939
	민간	25	155	2,056	2,085	1,863	3,238	6,017	4,577	6,386	13,250	7,666	55,366
	계	23,225	460	4,723	3,185	4,688	11,377	13,539	13,492	15,763	25,612	21,254	164,484
국제 사회		5,565	9,765	26,350	30,199	35,988	18,177	36,531	27,388	15,680	18,426	12,064	2,481
총 계		28,790	10,225	31,073	33,384	40,676	29,554	50,070	40,880	31,443	44,038	33,318	29,906
													403,357

*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기금지원분은 정부지원에 포함

1. 정부차원의 지원

가. 직접 지원

1999년 북한의 식량증산을 돕기 위해 처음 비료를 지원한 이후 매년 20~30만 톤씩 2006년까지 총 225.5만톤 7,058억원 상당의 비료를 당국차원에서 지원하였다.

2006년에 총 35만톤 1,200억원 상당(1차 15만톤, 2차 20만톤)의 비료를 2회에 걸쳐 지원하였다. 1차는 2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 2차는 5월 15일부터 7월 10일까지 해로를 통해 북한에 전달되었다. 북한 선박(11척, 선원 427명)과 인수 요원 28명이 수송에 참여하여, 선적기간 동안 남한측 지역인 울산, 여수, 군산 각 항구에 체류하였다.

2차 20만톤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7월 5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에 따라 추

가지원 논의가 유보되었으나, 당시 진행중이던 잔여물량 3개 항차 24,700톤은 소규모 물량인 점과 당초 우리가 북한에 대해 지원하기로 이미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하여 예정대로 북한에 전달하였다.

북한은 1998년에 체결한 「남북적십자 사이의 제3차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에 따라 도·시·군(구역) 단위의 비료 분배내역을 우리 측에 통보해 왔다.

대북 비료지원 현황

(단위:억원)

구 분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구 모	15.5만톤 (민간차원 4만톤 포함)	30만톤	20만톤	30만톤	30만톤	30만톤	35만톤	35만톤	225.5만톤
금 액	462	944	638	832	836	940	1,206	1,200	7,058

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북한은 1990년대 중반 계속된 수해와 가뭄 등으로 경제와 식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1995년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식량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는 식량난을 겪는 북한동포들이 현실적인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1995년 이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대북지원을 추진해 오고 있다.

북한의 지원요청 이후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사업도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정부는 1996년부터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UN 기구를 통한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활동에 참여해 왔다.

정부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WFP를 통해 매년 중국산 옥수수 10만톤씩 총 40만톤 888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2005년 8월 북한이 국제기구의 긴급구호성 지원 종료를 요구함에 따라 2005년도 식량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06년에는 WFP와 북한간 지원내용 및 규모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으로 식량지원이 추진되지 못했다.

한편 정부는 약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북한내 말라리아 환자 치료와 발병 확산 방제사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01년부터 매년 방제약품과 모기장, 진단장비 등 각종 기자재를 세계보건기구(WHO)를 통해 북한에 전달하였다. 2006년에도 말라리아 방제약품 및 장비, 모기장 등 약 10억 5천만원 상당을 지원하여 지금까지 총 48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우리 정부의 지원에 대해 북한 관계자는 WHO국제워크샵 등을 통해 말라리아 환자 발생이 감소했다고 발표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2003년부터는 북한 어린이의 심각한 영양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질병 발생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UNICEF를 통해 어린이 영양식 및 의약품 등에 6억원을, 2004년, 2005년, 2006년에는 어린이 영양식과 의약품 지원을 확대하여 각각 12억원, 10억원, 22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정부는 북한의 취약계층인 산모 및 영유아 보건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2개년 계획으로 지원을 약속하며 2006년 106억원 상당을 지원하였다.

정부차원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내역

① WFP(식량지원)

연도	규 모	지원액
1996	혼합곡물 3,409톤	200만불 (16억원)
1997	혼합곡물 18,241톤 옥수수 5만톤, 분유 300톤	2,053만불 (185억원)
1998	옥수수 3만톤, 밀가루 1만톤	1,100만불 (154억원)
2001	옥수수 10만톤	1,725만불 (223억원)
2002	옥수수 10만톤	1,739만불 (234억원)
2003	옥수수 10만톤	1,619만불 (191억원)
2004	옥수수 10만톤	2,400만불 (264억원)
계	511,950톤	10,836만불 (1,267억원)

② WHO(말라리아 방역, 영유아, 긴급구호)

연도	규 모	지원액
1997	의료기자재 등	70만불 (6.3억원)
2001	말라리아 방역	46만불 (6억원)
2002	말라리아 방역	59만불 (8억원)
2003	말라리아 방역	66만불 (8억원)
2004	말라리아 방역, 용천 긴급구호세트	87만불 (10억원)
2005	말라리아 방역	81만불 (9억원)
2006	말라리아 방역	100만불 (10.5억원)
	영유아지원	1,067만불 (106억원)
계		1,576만불 (163.8억원)

③ UNICEF(취약계층, 영유아)

연도	규 모	지원액
1996	분유 203톤	100만불 (8억원)
1997	ORS공장, 분유781톤	394만불 (35.4억원)
2003	취약계층 지원	50만불 (6억원)
2004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 (12억원)
2005	취약계층 지원	100만불 (10억원)
2006	영유아지원	230만불 (23억원)
계		974만불 (94.4억원)

2. 민간차원의 지원

민간단체를 통한 대북지원은 국민들의 모금이나 기업들의 기부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북한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북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여 남북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해 왔다. 또한 지원사업이 분야별로 전문화되면서 물품의 단순지원에서 사업위주로 발전되어 왔으며, 분배현장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남북 주민간 접촉면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은 기본적으로 민간단체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됨으로써 정부차원의 지원보다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6년 하반기 북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상황에서도 민간단체의 물품지원이나 사업은 꾸준히 진행되고, 모니터링 인원의 지속적인 방북도 이루어졌다.

민간차원의 대북지원은 1995년부터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기탁받은 물품을 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1997년 3월 31일 민간차원 대북지원 활성화 조치 및 5월 26일 남북적십자간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제1차 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민간차원의 지원도 대한적십자사를 단일창구로 한 남북 직접전달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1999년 2월 10일 대북지원창구 다원화 조치에 따라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제도를 도입하여, 민간단체도 독자적인 창구로 대북지원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1999년 10월 21일에는 대북지원사업자 요건 등을 규정한 「인도적 차원의대북지원사업처리예관규정」이 제정되었다. 대북지원사업자는 1999년에는 9개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말 현재 65개 단체가 활발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1995년부터 시작된 대북지원 역사가 10년을 넘어서고, 2004년에는 용천재해 복구를 지원하면서 대북지원의 성격도 변모되어 왔다. 기존의 긴급구호나 일회성 지원, 단순물품 지원에서 벗어나 북한에 기술 전수가 가능하거나 자립·자활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성 사업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지원분야도 농업개발, 보건의료, 영유아·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 전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원품목도 농자재·농기구, 의약품·의료기기, 병원·제약공장 시설기자재 등으로 다양화되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민간차원 대북지원액은 6,348억원(반출승인 기준)이며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1,718억원(27%, 국제적십자사 경유분 포함), 독자창구를 통해 4,629억원(73%)을 각각 지원하였다. 2006년에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44억원, 민간단체 독자창구를 통해 760억원 등 총 804억원의 대북지원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보건의료, 어린이 등 취약계층 지원 및 농업개발 분야 등의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00년부터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대북지원사업 중 지원의 시급성, 북측 수혜대상과 분배지역, 분배투명성 확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가. 개별사업

개별사업은 1개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1개 사업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00년 7개 단체 33.8억원, 2001년 13개 단체 38.4억원, 2002년 13개 단체 54.5억원, 2003년 18개 단체 75.5억원, 2004년 21개 단체 88.3억원, 2005년 26개 단체에 77.8억원, 2006년에 33개 단체에 80.8억원 등 6년간에 걸쳐 총 449억원 상당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였다.

개별사업의 지원분야 및 품목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농업분야에서는 씨감자, 젓소농장, 젓염소 농장, 조림사업 등이 지원되었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병원·제약공장 시설 기자재, 의약품, 의료기자재 등이 지원되었고 취약계층 지원의 경우 육아원이나 소학교 어린이 급식(빵, 국수, 콩우유 등), 공책공장 등이 지원되었다. 이러한 지원에 수반하여 재배농법 전수, 공동의료기술, 콩우유 작동법, 제약공장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기술전수 등 관련 전문가들의 교류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농수산물 수송비의 경우 국내산 농수산물을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지원되며 2001년부터 2006년까지 3개 단체에 대해 86.7억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2005년과 2006년에 지원한 못자리용 비닐의 경우 북측이 먼저 우리 민간단체들에게 지원을 요청한 품목이다.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이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는 봄철 북측의 수요에 맞추어 시의성 있게 못자리용 비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지원을 추진하였으며 정부도 2005년에는 16억원, 2006년에는 7억원의 기금을 지원하였다.

모니터링 및 사업협의 등을 위한 민간단체 방북인원도 꾸준히 증가하여, 1998년 34명에서 1999년 49명, 2000년에는 144명, 2001년에는 384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02년 이후 직항로를 통한 민간단체 기증자의 현장 확인 형식의 대규모 방북도 추진되고 있다. 2006년에는 5차례 476명의 직항로 방북을 포함하여 총 5,586명이 방북하여 대북지원을 매개로 한 남북간의 인적교류가 더욱 확대되었다.

나. 합동사업

2004년 용천재해와 대북지원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별단체나 개별사업의 일회성 지원보다는 북한의 자립·자활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중장기 프로젝트성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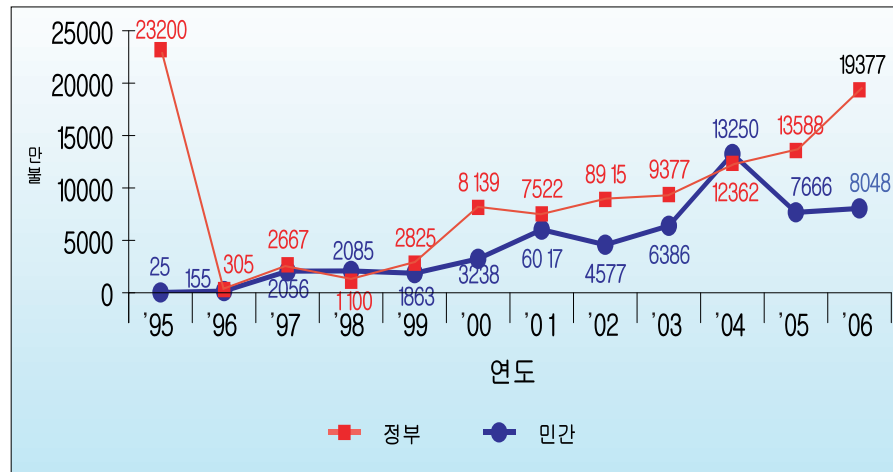
이를 위하여 정부의 협조하에 3개 이상 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2005년 합동사업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축산현대화 사업, 농업보건용수 개발사업, 모자보건 복지사업, 병원현대화 사업 등 5개 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에 대한 40여 억원의 기금이 지원되었다. 2006년 사업으로는 아래 표와 같이 5개 사업이 결정되어 2007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5개 합동 사업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1. 강남군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종합복지모델 개발사업	· 북한 지역개발사업의 모델을 개발 - 지역주민과 접근성이 강한 군지역을 대상으로 영양, 보건, 교육, 위생 사업 진행	○ 신규 (일부사업 2005년 계속)
2.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 북한 농민들의 농촌주택개량 사업 - 농촌주택 공급으로 생활환경 개선 및 건설기 교류	○ 계속
3. 복토직파신기술을 이용한 남북농업협력 증진사업	· 복토직파법에 의한 복합영농 지원 - 복토직파기술을 이용한 쌀 생산성 향상 및 생력재배기술 보급, 이모작 시험	○ 신규 (2007년부터는 자체재원으로 진행)
4. 북한 보건, 의료, 식수환경 개선사업	· 오수처리장 및 지하수 개발, 병원 및 학교 등의 정수시설과 농업용수 개발 - 깨끗한 물 공급으로 수인성 질병 예방	○ 계속
5. 보건의료체계개선사업	· 북한 1~4차 의료기관 및 의료기기 수리 지원 - 북한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종합적 지원프로 그램 구성	○ 계속

정부 · 민간차원 대북지원 추이

(단위 : 만달러)



합동사업의 경우 북한의 자립 · 자활능력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 사업추진 초기인 만큼 개별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경제협력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새로운 사업형태에 대한 북한의 이해와 협조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 ·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정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대북지원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관리, 지원하고 이러한 과제들을 검토, 해결해 나감으로써 합동사업을 대북지원 사업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민간자원 대북지원 내역

기 간	규 모	내 역
2000년도	3,238만달러 (387억원)	- 한적창구 : 16개 단체 113억 2,992만원 • 식량, 비료, 한우 500두, 의약품 등 - 독자창구 : 12개 단체 274억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 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2001년도	6,017만달러 (782억원)	- 한적창구 : 286억원 • 식량 14,175톤, 비닐 552톤, 내의 159만벌, 의약품 등 - 독자창구 : 19개 단체 496억원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 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2002년도	4,577만달러 (576억원)	- 한적창구 : 90억원 • 동내의 118만벌, 라면 39만개, 분유, 의약품, 의류 등 - 독자창구 : 25개 단체 486억원 • 의약품, 의료장비, 의류, 농기계, 비료, 밀가루, 설탕, 분유, 농약, 학 용품, 수경재배자재, 가축, 사료 등
2003년도	6,386만달러 (766억원)	- 한적창구 : 70억원 • 생필품, 밀가루, 농자재 등 - 독자창구 : 29개 단체 696억원 • 의료장비 및 의료용품, 구충제·영양제 등 의약품, 제약설비 및 원료 의약품, 농기계 및 농자재, 유가공설비, 축산용품, 건축용 자재·장비, 밀가루, 분유, 설탕, 의류, 학용품, 생활용품 등
2004년도	13,250만달러 (1,558억원)	- 한적창구 : 441억원 • 밀가루, 분유, 발효기, 운동화, 연탄, 농업용 비닐, 의류, 의약품, 철근, 휠체어 - 독자창구 : 33개 단체 1,117억원 • 밀가루, 설탕, 경운기, 온실비닐 등 농자재, 보일러, 학용품, 피복, 감귤, 놀이기구, 왕진가방, 타일 등 건축자재, 결핵약, 항생제, 의료설비 등
2005년도	7,666만달러 (779억원)	- 한적창구 : 46억원 • 밀가루, 분유, 두유기계, 축구용품, 연탄, 농업용 비닐, 의류, 의약품, 학생용가방, 자전거, 화물트럭 - 독자창구 : 43개 단체 733억원 • 밀가루, 설탕, 경운기, 온실비닐 등 농자재, 사료 및 가축, 보일러, 학용품, 피복, 감귤, 놀이기구, 생활용품, 시멘트 등 건축자재, 결핵약, 항생제, 의료설비 등
2006년도	8,048만달러 (804억원)	- 한적창구 : 44억원 • 밀가루, 분유, 두유기계, 축구용품, 연탄, 농업용 비닐, 의류, 의약품, 학생용가방, 자전거, 화물트럭 - 독자창구 : 58개 단체 760억원 • 밀가루, 설탕, 경운기, 온실비닐 등 농자재, 사료 및 가축, 보일러, 학용품, 피복, 생활용품, 시멘트 등 건축자재, 결핵약, 항생제, 의료 설비, 수해복구 자재 등
계	5억 5,366만달러 (6,346억원)	

다. 민·관 협력체제 강화

인도적 대북지원에 있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체제도 강화되어 왔는데, 협력의 계기가 된 사례는 2004년도의 북한 용천재해 복구지원이다. 용천재해 지원 과정에서 대북지원 민간단체간, 민·관간 상호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4년 9월 1일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상임운영단체와 통일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된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를 발족시켰다. 대북지원민관정책협의회는 대북지원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민관이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상호 보유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협의기구이다.

2005년에는 『대북지원 긴급구호 매뉴얼』을 마련하고 그동안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경과와 성과를 다룬 『대북지원 10년 백서』를 발간하였으며, 합동사업도 동 협의회를 통해 논의하였다. 2006년에는 북한 수해피해 복구지원, 합동사업을 논의하고 지원을 결정하였다.

3. 수해복구지원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인해 쌀·추가비료 지원 논의를 유보한다는 정부 입장이 정해진 가운데 7월중 북한에 큰 수해가 발생하였다. 북한은 수해 초기에는 외부 지원에 대해 매우 소극적 태도를 견지했으나 남한측 민간단체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지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8월초 「민화협」, 「북민협」, 「6.15 공동위원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단체들은 정부차원의 대북 수해지원을 촉구하였다. 정치권에서도 5당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의 조속한 대북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정부는 이러한 정치권 및 민간단체들의 의견을 고려하여 미사일 발사문제와는 별개로 순수 인도적 차원에서 한적 및 민간의 긴급구호 및 수해복구 지원

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결정하였다.

8월 19일 금강산에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대북수해 복구지원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다. 실무접촉 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쌀 10만톤(국내산), 자재장비(트럭 100대, 굴삭기 50대, 페이로더 60대, 시멘트 10만톤, 철근 5천톤), 긴급구호물품(모포 8만장, 긴급구호세트 1만점, 기증의약품 등) 등 763억원 상당의 구호물자를, 민간단체를 통해서도 매칭펀드 방식으로 100억원 상당의 복구물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가. 대한적십자 차원 지원

대한적십자사 차원의 수해복구물자 지원은 8월 30일 1항차 출항으로 개시되었다. 모니터링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남북적십자 실무접촉(8.19, 금강산)에서 “지원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몇 군데 선정하여 방문”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만큼, 우리측은 지원과정에서 지원물자 인도요원을 통

한적을 통한 지원계획 및 실적

지원계획		의결금액	지원시기	전달실적 (‘06.10.9현재)	비 고
품목	수량				
○ 쌀 10만톤	10만톤	400억원	8.30	○ 쌀 89,500톤	* 10.9 북한의 해실함으로 지원 유보
○ 자재장비		243억원	개시	○ 자재장비	
- 트럭	100대			- 시멘트 29,585톤	
- 굴삭기	50대			- 철근 3,800톤	
- 페이로더	60대			- 트럭 50대	
- 시멘트	10만톤			- 굴삭기 50대	
- 철근	5천톤			- 페이로더 60대	
○ 긴급구호물품		20억원		- 모포 2만장	
- 모포	8만장			- 긴급구호세트	
- 긴급구호세트	1만점			1만점	
- 기증의약품 등				- 의약품 4억7천만원	
○ 부대정비 등		100억원		상당	

해 동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였다.

그러나 2006년 10월 9일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한적을 통한 대북 수해복구 물자 지원은 잠정 유보되고, 모니터링 문제에 대한 협의도 중단되었다.

나. 민간단체 지원

민간차원에서는 생필품 중심으로 매칭펀드 기금지원분 100억원, 민간단체 자체 지원분 123억원 상당을 포함하여 총 223억원이 지원되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핵실험 이후 대한적십자를 통한 지원 유보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의 지원은 수해복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긴급구호 품목 위주로 계속되었다.

정부의 민간단체를 통한 100억원 상당의 지원분은 대북지원사업자 연합단체인 대북지원민간단체협의회가 주관하고, 지원품목은 신속한 전달을 위해 국내 산 위주로 조달하였다. 추진과정 중 북한의 핵실험 여파로 사업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민간단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2006년말까지 정부 매칭 지원분인 100억원 상당의 물자를 북한에 전달하였다. 정부 매칭 지원분의 지원내역은 밀가루 30억원, 생필품(콩기름·세탁비누) 16억원, 의약품 5억원, 의류용품

민간차원 수해 지원현황

(단위: 백만원)

항 목	품 목	매칭펀드 지원분	자체재원 지원분
식 량	밀가루	2,995	1,092
생필품	콩기름, 세탁비누	1,579	210
의류용품	내의, 방한복, 양말, 옷감 등	2,652	7,485
복구장비 및 자재	경운기, 리어카, 손수레, 삽 등	1,782	1,066
의약품	구급약 등 약품	543	2,164
운송비	수송 등 물류비	449	288
합 계		10,000	12,305

2006년 정부·민간 지원현황

구 분	지원 규모	지 원 내 역
정부지원	19,939만달러 (1,99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료 35만톤 지원(12,002만달러/1,200억원 상당) - WHO를 통한 말라리아 방제 지원(101만달러/10억원) - WHO를 통한 북한 영유아 지원(505만달러/106억원) - UNICEF를 통한 어린이 영양식 등 지원(230만달러/23억원) - 수해 복구지원(5,202만달러/520억원) - 민간에 대한 정부기금 지원(1,338만달러/134억원)
민간지원	8,048만달러 (80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적창구 : 4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가루, 분유, 두유기계, 축구용품, 연탄, 농업용 비닐, 의류, 의약품, 학생용가방, 자전거, 화물트럭 - 독자창구 : 58개 단체 76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가루, 설탕, 경운기, 온실비닐 등 농자재, 사료 및 가축, 보일러, 학용품, 피복, 생활용품, 시멘트 등 건축자재, 결핵약, 항생제, 의료설비, 수해복구 자재 등

*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기금지원분을 정부지원에 포함

(방한복 등) 27억원, 복구장비 및 자재(삽, 손수레 등) 18억원, 운송비용 4억원 등이다. 민간 자체 지원분은 29개 단체 참여하에 의류, 밀가루, 의약품 등 생필품 위주로 123억원이다.

모니터링 문제와 관련해서는 민간단체와 북한간 적절한 시기에 분배현장을 방문한다는 데에 합의하였으나, 북핵 실험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앞으로 북한과의 협의를 통해 분배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예정이다.

제3절 새터민(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 지원

정부는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입국시킨다는 원칙 하에, 국내법과 UN난민협약 등 국제법에 부합되게 이들을 보호하고 국내로 수용하고 있다. 또한 체류국가에서의 체류여건이 개선되고,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복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의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들에 대해서는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능력 배양을 통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등 새터민 민간지원 단체와 협력하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1. 국내입국 현황

새터민 국내 입국인원은 1990년대 중반 이전에는 매년 수십명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의 식량난 악화로 꾸준히 증가해 오다가 1999년 100명, 2002년 1,000명을 넘어선 이래 2006년에는 2,000명을 초과하였다.

입국추이

(단위: 명)

구분	'89까지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계
남	564	80	35	43	56	53	90	180	294	514	468	625	422	486	3,910
여	43	6	6	13	30	18	58	132	289	625	813	1,269	961	1,533	5,796
총계	607	86	41	56	86	71	148	312	583	1,139	1,281	1,894	1,383	2,019	9,706

성별 입국 비율을 살펴보면, 여성의 입국비율은 1989년 이전에는 7%에 불과하였으나, 1997년 35%, 2000년 42%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새터민의 입국비율이 남성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여성 새터민의 입국비율이 76%에 달함으로써 남성 입국인원 비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2. 새터민 자립·자활 지원정책 내용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입소하여 10주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취적(就籍), 주거알선 등 우리 사회 편입에 필요한 지원을 받게 된다. 하나원을 수료한 이후에는 정착지원금, 취업지원, 교육지원, 의료지원 등 자립·자활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가. 사회적응교육

하나원은 1997년 제정된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설치된 새터민 정착지원시설로서, 국내에 입국한 새터민들이 우리사회 일원으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교육·지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새터민들은 하나원에서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소양 교육과 초기 정착을 위한 여러 가지 안내와 지원을 받게 된다.

사회적응교육은 새터민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태도,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교육 기간은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6년 9월부터 12주에서 10주로 조정되었다. 새터민들은 이 교육과정을 통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우리 사회의 제도와 질서에 대한 이해를 키우고 언어와 사고방식·생활습관 등의 차이로 인한 문화적 이질감을 해소해 나간다. 가정, 관공서, 도시, 역사현장 등을 탐방하는 현

장학습에서 새터민들은 남한의 실생활을 체험하고 일반 국민들과 접촉하는 기회를 가진다.

탈북 및 제3국 도피·은신 과정의 어려움과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해 생긴 심리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되며, 하나원 내 개설된 진료소인 「하나의원」에서는 공중보건과의 전문 간호인력이 새터민의 건강을 돌본다.

하나원에서는 또한 기초적인 직업교육·훈련과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터민의 취업과 학교진학을 안내하고 돕는다. 통일부는 2006년 5월 새터민의 직업훈련과 취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동부와 「새터민 고용지원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기초직업교육의 주요 부분은 한국폴리텍대학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다. 폴리텍대학에서 직업훈련은 직종에 대한 성별 선호와 적합성을 고려하여 남녀별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정규 프로그램 외에도 교육생 문예공모, 입소 환영공연, 수료 환송공연, 야간 자율학습 등 자율형·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도입되어 새터민 교육생에게 교육 참여동기를 부여하고 자긍심과 자립심을 길러 주고 있다.

하나원 교육과정

교 육 주 제	교육시간	주 요 내 용
정서안정 및 건강 증진	41시간	○ 심리상담, 심성수련, 건강검진 등 프로그램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건강 회복
우리 사회 이해 증진	118시간	○ 민주주의, 시장경제, 남한의 문화와 법률 등 교육 ○ 가정·관공서·도시 탐방, 봉사활동 등 현장학습
진로 지도 및 직업기초능력 훈련	144시간	○ 직업정보, 직업훈련·교육제도 안내 및 진로상담 ○ 직종별 직업훈련(폴리텍대학), 직종설명회, 고용지원 기관 및 산업체 현장 방문 ○ 정보화(컴퓨터) 교육
초기 정착지원	57시간	○ 정착금 지급, 주거지 배정, 취직, 주민등록증 발급, 의료지원 등 정착지원제도 이해

한편 아동 및 청소년 새터민들은 하나원 교육기간 중 각각 인근의 삼죽초등학교와 2006년 3월에 개교한 한겨레중·고등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으며 우리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고 있다. 2001년부터 아동 및 청소년 새터민을 위해 하나원 내에 운영해 온 '하나둘학교'는 한겨레중·고등학교 위탁교육 외 시간에 특화된 학습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하나원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민족화해위원회」를 비롯한 7개 민간단체의 교육프로그램을 공모하여 진행하는 등 사회적응교육 과정 운영에 있어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하나원에서는 사회적응교육뿐 아니라 새터민에 대한 임대주택 알선, 정착금 지급, 호적 취득 및 주민등록증 발급 등의 정착지원사업을 실시하고 각종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여 새터민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원은 본원과 분원을 합쳐 4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으며, 연간 1,900명을 교육할 수 있다. 1999년 7월 하나원이 개원한 이후 2006년 12월까지 총 8,025명이 사회적응교육을 수료하였다. 정부는 증가되고 있는 입국 새터민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나원 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나. 정착기반 지원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마친 새터민들은 사회 각지로 배출된다. 정부는 사회로 진출하는 새터민이 초기정착에 필요한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정착금은 기본금과 가산금, 장려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다.

2006년 현재 기본금은 1인세대 기준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가산금은 노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최고 1,540만원까지 지급한다. 장려금은 장기간 직업훈련에 참가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자립·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새터민에게 최고 1,5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이 밖에 임대주택 제공과 함께 주거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주거지원금은 세대 구성원의 수에 따라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며, 지방거주를 권장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방 거주자에게는 지방 거주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과 재산수준에 따라 의료급여법 상의 의료보호대상자로 지정하여 각종 의료비 면제혜택을 받거나 생계가 곤란한 사람에 대해서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편입되도록 적극 주선하고 있다.

정착지원 주요 내용

구 분	항 목	내 용
정착금	기본금	○ 1,000만원(1인가구)~3,200만원(7인이상)
	장려금	○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장기취업자의 경우 최대 1,540만원 지원
	가산금	○ 노령, 장애, 장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1,540만원 지원
주 거	주택알선	○ 임대 아파트 특별알선(영세민 보다 우선알선)
	주거지원금	○ 1,000만원(1인 세대), 1,500만원(2인이상 세대)
사회복지	생계급여	○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달 가구에 대해 지원 - 36만원(1인 세대)~132만원(6인이상 세대) - 근로능력가구는 사회배출 2년차부터 근로조건 부과
	의료보호	○ 의료보호 1종 수급자로서 의료 혜택

다. 취업 지원

정부는 새터민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정부는 새터민의 취업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 46개 고용지원센터에서 53개 고용지원센터로 새터민 취업보호담당관을 확대 지정하여 전문적인 진로지도와 함께 직업훈련기관을 안내하고 취업 사업장을 연결시켜 주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취업을 지원·알선해 주고 있다.

새터민이 직업훈련을 받을 경우 직업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지원금 지원 현황

(단위:만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9
업체수	91	226	274	240	218	323	378
인 원	105	251	296	281	269	439	492
지급액	2억 7천	9억 9천	11억 3천	10억 9천	9억 4천	14억 3천	12억 1천

새터민에게는 직업훈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훈련기간 중 직업훈련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그 결과 2006년 11월 현재 658명이 직업훈련을 받았다. 또한, 새터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절반을 2년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가 2000년부터 도입되어 새터민의 안정된 직장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2006년에는 3/4분기까지 378개 사업장, 새터민 492명 고용에 대해 12억 1천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05년 316개 사업장, 새터민 439명 고용에 대한 고용지원금 지급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새터민의 자립·자활 노력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라. 교육지원 및 학력·자격 인정

정부는 새터민의 학습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지원도 꾸준히 강화하였다. 교육지원과 관련하여 중·고등학교 및 국·공립대학교에 편·입학한 사람에게는 학비 전액을 면제해주고, 사립대학인 경우 정부와 학교가 각각 학비의 반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2006년에는 총 708명의 대학생이 8억 7천만원의 학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북한에서 취득하였던 학력이나 자격을 인정해줌으로써 이들의 자립·자활기반을 강화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2006년 3월에는 새터민 청소년들의 사회 및 학교 적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새터민 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를 개교하였으며, 정부에서는 동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한겨레 중·고등학교」는 2006년 12월 현재까지 약 80명의 학생을 교육시키고 있으며, 2007년에는 학생수 증원 등

학교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2006년 12월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그 동안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던 의료·교육 등 전문 분야 자격인정의 폭도 넓어질 전망이다.

마. 거주지 보호 및 민간단체와의 연계

거주지에서의 정착지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1999년 8월부터 각 기초자치단체에 거주지보호담당관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거주지보호담당관은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새터민이 지역사회에 순조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및 상담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거주지에서는 정부 이외에도 사회·종교단체 등 새터민 지원 민간단체에서 각종 생활상담 취업·결연 등 분야별로 특화된 다양한 지원을 해줌으로써 새터민의 안정된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 설립된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정부와 민간단체의 접촉창구 역할 및 민간단체의 통합·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북한이탈주민후원회가 민간단체 활동지원을 공모제로 전환함으로써 새터민 지원영역의 다양화, 민간단체간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를 통해 민간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켰다.

2001년부터는 새터민 밀집거주지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지원단체가 참여하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지역협의회는 지역실정에 적합한 특화된 사회적응 정착프로그램, 지역사회의 안내 및 적응지원, 대상별 직업훈련 알선과 취업확대, 종합사회복지관의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민간단체의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정착도우미제는 2005년에 실시된 이후 2006년에 그 활동 영역을 확대·강화하여 약 1,300명의 정착도우미가 활동하고 있다. 정착도우미는 새터민의 거주지 편입 초기 지역정보 제공, 생활안내 및 상담, 복지관과의 연계 등 초기 정착생활을 돕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제4절 북한인권 개선 노력

북한의 인권상황은 북한 정보의 제한으로 인해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우나, 국내외 인권단체 및 국제기구 등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듯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는 인권을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하에 정부는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일관된 실천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첫째, 북한주민의 정치적·시민적 권리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을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전반적인 상황개선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한편, 남북대화시 국제사회의 우려를 전달하고 인권관련 기술협력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정부는 국내입국 희망 탈북자에 대해서는 전원 수용하여 안정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셋째, 정부는 정치적·시민적 권리 등도 기본적으로는 생존 가능한 삶의 상황에서만 논의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북한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최우선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당국차원에서 쌀·비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어린이·산모 등 취약계층에 대해 국제기구(WHO·UNICEF 등)와 협력하여 건강관리·영양개선 사업을 추진하였고, 민간단체의 활동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보조하여 다양한 보건의료, 농업 지원 등을 실시하였다.

넷째, 남북간 최우선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과 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납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2006년에는 제1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간 협력해 나가기로

북한인권 관련 정부입장('05.11.3 NSC 상임위원회 결정)

- 인권은 인류보편적 가치로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우려와 관심을 갖고 있으며, 포괄적 개선에 기여한다는 입장임.
-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해 各國별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접근방식을 전략적으로 검토·선택할 수 있다고 봄.
- 정부는 평화번영정책을 통해 남북간 긴장완화와 화해협력을 추구하면서,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음.
 - 정부는 한반도 현실 및 남북관계 특수성을 고려, 우선 북한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인도적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정부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있는 탈북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 등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해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임.
- 정부는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노력이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해 나갈 것임.
 - 정부는 국제사회의 다양한 노력을 평가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조화될 수 있도록 우리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임.
 - 북한당국이 인권분야에서 국제사회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주민의 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기를 촉구함.

합의하였으며, 남북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위한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이후 남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였다.

다섯째, 북한의 인권실상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정리 등 정보자료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정부는 통일연구원의 「북한인권센터」와 협조하여 매년 『북한인권백서』를 발간하고, 국내 NGO의 워크숍 개최 및 자료 발간 등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6년에는 제62차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였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국제인권기구의 북한인권결의안 상정시 기권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투표입장설명문(EOV)을 통해 국제사회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우려에 공감을 표시해 왔다. 2006년의 경우,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것은 핵실험 이후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북한과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의도였다. 또한 정부는 비탄 문타폰 유엔북한인권 보고관의 방한활동에 협력하고, 미국·EU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연구기관·NGO 등의 국제세미나 개최 및 참가를 지원하는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인권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지원하여 북한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경우 기본적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